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경제·통상정책 방향 전망과 시사점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목 차

요 약 / 1

1. 오바마 정부의 경제·통상정책 방향 전망 / 5

- 5 | 가. 경제·통상관련 핵심 브레인 및 성향
- 8 | 나. 주요 경제정책 방향 전망
- 12 | 다. 주요 통상정책 방향 전망
- 16 | 라. 주요 산업정책 방향 전망

2. 우리나라 교역 및 투자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 18

- 18 | 가. 한-미 경제통상관련 핵심 이슈 및 전망
- 20 | 나. 주요 산업별 대미수출 및 투자에 미치는 영향
- 22 | 다. 미국 현지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주요 산업별 대미수출
및 투자에 미치는 영향

요 약

1. 오바마 정부의 경제·통상정책 방향 전망

□ 경제·통상관련 핵심 브레인 및 성향

- 대부분 클린턴 정부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좌파 민주당 색채가 짙은 인사들보다는 중도주의 경제학자(Centrist Economics)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제이슨 퍼먼(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 어스텐 굴스비(시카고 대학교 교수), 제프리 리브만(하버드 대학교 교수), 데이빗 커틀러(하버드 대학교 교수), 다니엘 타롤로(조지타운 대학교 교수), 윌리엄 대일리(J.P Morgan Chase 기업사회공헌 위원장), 라엘 브레이너드(브루킹스 연구소 부소장) 등이 주요 경제·통상정책 참모임.

□ 주요 경제정책 방향 전망

- 당면 과제인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세금 환급 등 경기부양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되, 미국 노동자의 경쟁력 강화 및 사회안전망 강화 노력이 부시 정부에 비해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부시 정부의 고소득층 감세, 親기업, 親자유무역 기조에서 탈피하여, 중산층을 위한 감세(고소득층 증세), 노조 강화, 세제 혜택 중단을 통한 오프쇼어링(해외로 일자리를 수출하는 행위, 예를 들면 미국기업의 인도 콜센터 운영) 규제 등 기업에 대한 규제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 부시 정부의 트리클다운(Trickle-down: 대기업에 대한 재정적 우대를 통해 중소기업이나 소비자에게 이득이 전달됨.) 정책과는 대별되는 상향식(Bottom-up) 경제철학, 일명 오바마노믹스(Obamanomics)를 기본 정책방향으로 삼을 것으로 예상됨.

□ 주요 통상정책 방향 전망

- 오바마 당선자는 원칙적으로 자유무역을 찬성하지만 최근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자국 산업 보호·육성과 노동·환경기준 강화를 구실로 한 보호무역주의가 고개를 들 것으로 예상된다.
- 즉, 무역협정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반덤핑, 상계관세 부과 등)가 강화될 전망이고, 중국을 타깃으로 하는 환율 조작에 대해서도 부시 정부보다 강경한 입장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공화당과의 정책공조 필요성, 미국의 자유무역 리더로서의 역할과 미국 소비자 후생을 고려하여 집권 초기의 보호무역주의는 잦아들 것으로 예상된다.

2. 우리나라 교역 및 투자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 한-미 경제·통상관련 핵심 이슈 및 전망

- 오바마 당선자는 대선 캠페인 당시부터 자동차 교역 불균형을 이유로 한미FTA 협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줄곧 표명해왔으며, 미국 현지 오피니언 리더들도 자동차 부문의 문제 해결을 한미FTA 비준의 주요 변수로 인식하고 있음.
- 경기침체 및 무역적자 확대에 따라 보호무역 압력이 거세질 것으로 우려되며, WTO 제소 등을 통한 제재조치 강화는 중국이 주요 타깃일 것으로 전망되나, 우리나라 역시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분석됨.
- 해외로 일자리를 수출하는 기업(오프쇼어링)에 대해서 세계 혜택을 중단하고, 미국 내 일자리 수를 유지하거나 확충하는 기업에게 세계 혜택을 제공할 경우, 미국 기업의 그린필드 투자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미국 기업 투자유치 여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 주요 산업별 대미수출 및 투자에 미치는 영향

- 단기적으로 정치적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요소를 제외하면 대선 결과가 우리나라 주요 산업별로 대미수출과 투자유치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오히려 미국의 경기침체 정도가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세부 산업별로는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IT와 재생에너지 산업은 기회요인이, 자동차, 철강, 섬유 산업은 위협요인이 많을 것으로 전망됨.
- 무선통신기기는 내년 수출에 있어서 미국의 경기침체 영향을 받겠지만 오바마 당선자의 공약대로 전미 지역에 브로드밴드 설치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할 경우, 우리 IT업계의 대미 수출에 청신호가 켜질 수 있음.
- 미 의회를 통과한 구제금융법안에 재생에너지 인센티브 연장안이 포함되어 있어 미국의 재생에너지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오바마 당선자가 연방정부 차원에서 RPS(전력회사가 일정 비율 이상의 전력을 재생에너지원으로부터 생산·공급하는 것)를 강제로 실시할 경우, 우리 관련업계에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음.
- 반면, 오바마 정부의 자동차산업에 대한 폭넓은 지원정책을 바탕으로 미국의 미국 자동차산업 경쟁력이 높아질 경우, 우리나라의 대미 자동차 수출은 상대적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음. 단, 빅3에 자동차부품을 수출하는 우리 기업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음.
- 철강과 섬유 산업은 외국산 제품으로 인해 미국 내에서 상대적으로 피해를 많이 본 것으로 인식되는 산업으로서 오바마 정부에서의 전반적인 보호무역주의 강화 움직임 속에서 비록 타깃은 중국산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다만, 중국산 제품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경우, 우리 기업이 반사이익을 얻을 수도 있음.

1. 오바마 정부의 경제·통상정책 방향 전망

가. 경제·통상관련 핵심 브레인 및 성향

□ 개요

- 오바마 당선자의 대선 후보 시절 경제·통상관련 핵심 브레인은 대부분 클린턴 행정부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인사들로 구성되었으며, 좌파 민주당 색채가 짙은 인사들보다는 중도주의 경제학자(centrist economics)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이를 반영하듯, 컬럼니스트 David Leonhardt는 뉴욕타임즈 기고문 (Obamanomics)을 통해, 오바마의 경제 정책을 "클린턴 정부의 자유시장 중도주의에 유럽식 사회 민주주의가 가미된 것"¹⁾으로 평가함.
 - 즉, 정부의 역할이 확대되고, 부의 재분배에 역점을 둘 것임.

□ 주요 경제정책 참모 및 성향

- 제이슨 퍼먼(Jason Furman)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
- 
- 조세, 보건의료(Health care), 사회보장(Social security) 정책 전문가로서 브루킹스 연구소 내의 경제정책 리서치 그룹인 Hamilton Project를 주도함.
 - 클린턴 정부에서 경제정책에 대한 자문을 하고(Special assistant to the president for economic policy), 대통령 경제자문위원회(Council of Economic Advisers) 내 스태프 이코노미스트로 참여함.

1) 공화당의 경제 정책 실패에 대해 저술한 책인 Grand New Party(Ross Douthat/Reihan Salam 공저)에서 인용

○ 어스텐 굴스비(Austan Goosbee)

시카고 대학교 교수



- 조세정책 전문가로서 캠페인 당시 시니어 경제정책 참모로 활동하면서 오바마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경제정책의 큰 틀을 만든 인물로 알려져 있으며, 다른 참모들과는 달리 기존 정부 내에서 일한 경험이 거의 없는 중도주의 경제학자(Centrist economist)로 알려져 있음.
- 워싱턴 포스트 칼럼니스트인 George F. Will는 2007년 굴스비와의 만남 이후, "민주당과 경제학자(Democratic Economist)"라는 제목으로 글을 기고하였는데, 동 기고문에서 굴스비는 소득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해법으로 교육 강화를 꼽고, 이에 대한 재원 마련을 위해 정부가 세율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함. (고소득층 증세, 중산층 감세)
- 중국산 제품 수입은 미국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을 뿐만 아니라, 미국 국내산 제품과 직접적으로 품목이 겹치는 비중이 5~10%에 불과하기 때문에 위안화 절상 시 미국산 소비가 늘어나기보다는 베트남과 같이 중국산보다 저렴한 국가 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언급함.
- 대선 관련 경제정책 토론회에서 노동 및 환경 이슈와 미국의 이익이 잘 반영된 자유무역만을 추진해야한다고 역설함.

○ 제프리 리브만(Jeffrey Lieberman)

하버드 대학교 교수



- 클린턴 정부에서 사회복지 정책을 수립하는데 깊숙이 관여한 바 있으며, 오바마 캠페인에서도 조세 및 재정정책 뿐만 아니라 사회보장정책에 대한 자문을 제공함.
- 어스텐 굴스비와 마찬가지로 중도주의 경제학자로 알려져 있음.

○ 데이빗 커틀러(David Cutler)
하버드 대학교 교수



- 오바마 캠페인에서 보건의료(Health care) 정책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음.
- 클린턴 정부에서 대통령 경제자문위원회(Council of Economic Adviser)와 국가 경제위원회(National Economic Council)의 일원으로 활동한 바 있으며, 실패로 끝난 1990년대 초 클린턴 정부의 보건의료(Health care) 개혁안에 참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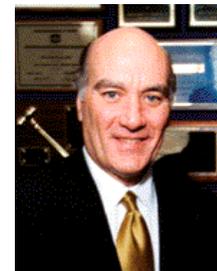
□ 주요 무역정책 참모 및 성향

○ 다니엘 타룰로(Daniel Tarullo)
조지타운 대학교 교수



- 국제규범과 국제법 전문 교수로서 클린턴 정부에서 국제 경제 분야 자문 역할을 하고, 국무부 차관(Assistant secretary of state for economic and business affairs)을 역임함.
- USTR 대표로 지명될 가능성이 높으며, 보호무역주의라는 비난을 피할 수 있는 무역정책 개발과업을 수행할 것으로 관측됨.

○ 윌리엄 대일리(William Daley)
J.P Morgan Chase 기업사회공헌 위원장



- 클린턴 정부에서 NAFTA T/F장을 역임하고, 상무부 장관으로 입각한 바 있음.
- 오바마 당선자와는 달리 NAFTA 신봉자이며, Chicago Tribune과의 인터뷰에서 오바마 당선자가 NAFTA에 대해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하는 것에 대해 이견(A difference of opinion)을 갖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음.

○ 라엘 브레이너드(Lael Brainard)

브루킹스 연구소 부소장



- 클린턴 정부에서 국가 경제위원회(National Economic Council) 부소장(Deputy Director)을 역임했으며, 중국의 WTO 가입, 1997~1998년 아시아 금융 위기 및 NAFTA 이행 시기에 자문역을 맡음.
- 오바마 당선자의 대선 후보 시절, 오바마 당선자를 대리해 패널로 참석한 무역정책 포럼에서 FTA 협정 내 노동 및 환경 이슈 반영, 협정 위반시 WTO 제소 강화 등을 주장함.
- 다니엘 타블로와 함께 USTR 대표로 하마평에 오름.

□ 기타 참모

- 클린턴 정부에서 재무부 장관을 역임한 Robert Rubin과 Larry Summers, 지미 카터 정부에서 FRB 의장을 지낸 Paul Volker, 클린턴 정부 자문가였던 Laura Tyson, 투자가 Warren Buffett,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Joseph Stiglitz, Dan McFadden, Robert Solow 등이 오바마 당선자의 경제·통상관련 참모 역할을 수행함.

나. 주요 경제정책 방향 전망

□ 기본 방향

- 당면 과제인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세금 환급 등 경기 부양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되, 미국 노동자의 경쟁력 강화(무역조정지원법 지원 범위 확대 등) 및 사회안전망 강화 노력이 부시 정부에 비해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오바마는 부시정부의 트리클다운(Trickle-down: 대기업에 대한 재정적 우대를 통해 중소기업이나 소비자에게 이득이 전달됨.) 정책과는 대별되는 상향식(Bottom-up) 경제철학, 일명 오바마노믹스(Obamanomics)를 기본 정책방향으로 삼을 것으로 예상됨.

- 부시 정부의 고소득층 감세, 親기업, 親자유무역 기조에서 탈피하여, 중산층을 위한 감세(고소득층 증세), 노조 강화, 세금 혜택 중단을 통한 오프쇼어링(Offshoring²⁾) 규제 등 기업에 대한 규제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 오바마 정부는 세제(Tax code) 개혁을 통한 부의 재분배에 역점을 둘 것으로 전망됨.

□ 공약 주요 내용

- 오바마 당선자는 선거 캠페인 당시, 현 경제위기의 원인을 1) 생필품, 학비, 의료보험 비용 증가에도 불구하고 임금 상승률이 정체된 점, 2) 부시 정부의 고소득층에 대한 감세 정책으로 소득 불균형이 확대된 점 등 2가지로 규정함.
- 이 같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중산층 감세 및 고소득층 증세를 골자로 한 세제(Tax code) 개혁, 공공 토목공사 발주, 신기술 지원 확대를 통한 고용창출 등을 공약으로 제시함.
 - 전체 과세대상 인구의 95%를 차지하는 일반 미국인(Ordinary Americans)에 대해서는 감세, 나머지 고소득층(5%, 연간 25만 달러 이상 소득자)에 대해서는 증세를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함.
 - 新뉴딜정책으로 명명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등 공공분야 재정 지출 확대 및 재생에너지 기술을 비롯한 첨단 기술 R&D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를 통해 고용 창출을 약속함.
 - 반면, 오프쇼어링 기업에 대해서는 세금 혜택을 종료함으로써 미국 내 일자리를 보호하고자 함.
- 아울러, 근로자 단결권 및 파업권 보호 확대,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자 권리를 강화함으로써 현재의 임금 정체현황을 타개할 것을 공약으로 제시함.

2) Offshore Outsourcing이라고도 하며, 선진국 기업이 네트워크 운영, 시스템 유지보수, 재해복구서비스 등 관련 부문을 비용이 저렴한 국가의 기업에게 아웃소싱하는 것으로 인터넷 및 통신기술의 발달로 지구 반대편 국가에서 의뢰한 업무라도 실시간 감독·조정이 가능해지면서 급속도로 확대됨.

□ 세부 공약 내용

○ 경기회복 긴급조치

- 석유기업에 초과이득세(windfall profit tax)를 부과함으로써 즉각적으로 가구당 1,000달러의 긴급 에너지 환급금을 제공함.
- 주정부나 로컬정부가 보건의료, 교육, 주택, 연료비 지원 예산을 삭감하거나, 재산세나 톨게이트 수수료를 인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250억 달러 규모의 州 성장기금(State Growth Fund)을 마련함.
- 아울러 같은 규모(250억 달러)로 고용창출 기금을 조성하고, 도로나 교량 관리 및 학교 개보수 재원삭감을 방지하여 100만개 일자리를 유지함.

○ 중산층 세제 혜택

- 근로자 1인당 500달러 또는 근로가구 당 1,000달러를 한도로 근로소득 세금 공제(Making Work Pay tax credit)를 도입하고, 연간 소득 5만 달러 미만의 노인을 대상으로 소득세를 철폐함.

○ 제조업 부문 투자 확대 및 500만개의 신규 그린 일자리 창출

- 현재 미시건 주정부에서 추진중인 이니셔티브 중 하나인 미시건 21세기 고용기금³⁾(Michigan 21st Century Jobs Fund)을 벤치마킹하여, 고급 제조업기금(Advanced Manufacturing Fund)을 조성함.
- 제조업체의 효율성 제고 및 신기술 도입을 지원하는 제조 확대 파트너십 (Manufacturing Extension Partnership) 재원을 2배로 확대함.
- 향후 10년에 걸쳐 1,500억 달러를 투자하여 차세대 바이오 연료 및 연료 인프라 개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상용화 촉진, 상용화 단계의 재생에너지 개발 촉진, 저공해 석탄 발전소 건립 등을 지원할 예정임. 또한 이에 걸 맞는 고숙련 노동자 양성에도 투자를 병행할 예정임.

3) 미시건 주에서 신규 제품을 생산하거나 신규 고용 창출이 가능한 혁신적인 제안서를 제출한 기업에 대해 기금을 제공함.

- 현재까지 주정부 차원에서 시행했던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s)⁴⁾ 제도를 연방정부 차원에서 강제로 실시하고, 총생산 전력 중 재생에너지 생산 전력 비율을 2012년까지 10%, 2025년까지 25%로 확대할 계획임. 아울러 재생에너지 생산에 제공되는 생산세액공제(Production Tax Credit)도 확대함으로써 투자 활성화를 통한 그린 일자리 창출을 추진함.
- 全美 교통 인프라 재건축을 통한 고용 창출
 - 全美 인프라 재투자 은행(National Infrastructure Reinvestment Bank)을 설립하고, 향후 10년간 총 600억 달러를 교통 인프라 시설 개선 프로젝트에 투자함으로써 고용을 창출함.
- R&D 세금공제 영구화 및 全美 지역 차세대 초고속 정보통신망 보급을 통한 고용 창출
- 세금혜택 및 민관 비즈니스 인큐베이터 全美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소기업 지원
 - 신생 기업이나 소기업에 대해 자본이득세를 철폐하여 혁신 및 고용 창출을 추진함. 아울러, 연간 2억 5천만 달러를 투입하여 열악한 지역 내 민관 비즈니스 인큐베이터 확대를 지원함.
- 근로자 단결권 및 파업권 보호 확대, 물가상승률에 연동한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자 권리 강화

4) 전력회사가 일정 비율 이상의 전력을 재생에너지원(바이오매스, 지열, 풍력, 태양열 등)으로부터 생산 공급하도록 함으로써 전체 생산된 전력 내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고자 함. 주정부 대다수가 강제로 실시하고 있으나 일부 주에서는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각 에너지원에 대한 비율을 지정해 놓기도 함. 현재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의무 목표 비율을 설정하여 강제하고 있지 않음.

다. 주요 통상정책 방향 전망

□ 기본 방향

- 오바마 당선자는 원칙적으로 자유무역을 찬성하지만 노동·환경 기준 강화를 구실로 한 보호무역주의가 고개를 들 것으로 예상됨.
 - 오바마 당선자와 경제·통상 참모들은 각종 토론회에 참가하여 노동·환경 기준이 충족되고 자국민 이익이 충분히 반영된 자유무역에는 찬성하지만, 현재 계류중인 미-콜롬비아 FTA(노조탄압)와 한미 FTA(자동차 교역 불균형)는 노동환경 기준이 미약하고, 미국 이익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반대한다는 입장을 피력함.
 - 아울러, 체결된 지 16년이나 경과한 NAFTA는 미국에 수혜효과가 과대선전 (Oversold) 되었을 뿐만 아니라 노동·환경 기준이 미흡하기 때문에 대통령 취임 직후 캐나다 수상, 멕시코 대통령과 만나 이를 개정할 것이라고 강조함.
- 오바마 정부에서는 무역협정 위반에 대한 제재 조치가 강화될 전망이다.
 - 새로운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기보다는 기존에 체결된 협정, 특히 WTO 협정에 대한 이행을 강조하며, 협정 위반시에는 WTO 제소 등을 통한 제재조치 단행에 역점을 둬.
 - 이에 따라 WTO 제소 건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부시 정부에서는 WTO 제소 건수가 연평균 3건에 불과한데 반해, 클린턴 정부에서는 이의 4배에 육박하는 11건에 달한 바 있음.
- 오바마 정부는 환율 조작에 대해서도 부시 정부보다 강경한 입장을 취할 것으로 예상됨.
 - 오바마 당선자는 공화당 Bunning 상원의원과 민주당 Stabenow 상원의원과 함께 중국 등 비시장경제 국가 수출품에 보조금 지급 및 환율 조작(외국 통화 평가절하 시)이 있는 것으로 판정 시, 상계 관세를 부과토록 하는 Fair Currency Act of 2007(현재 상원위원회에 계류중)을 도입한 바 있음.

〈Fair Currency Act of 2007〉

- 중국 등 비시장경제 국가 수출품에 보조금 지급 및 환율 조작(외국통화 평가절하 시)이 있는 것으로 판정 시, 상계 관세를 부과함.
- 중국산 수입품으로 인해 미국 국내산 동종 유사제품 생산자에게 시장 혼란이 야기되는지 판단하는 조건으로 환율 조작을 포함함.
- 미 국방부가 미국 내 주요 방위산업 제품과 경쟁관계에 있는 중국산 방위 제품을 조달하지 못하도록 금지함.
- 동 법안 조항들을 캐나다, 멕시코산에도 동일하게 적용함.
- 현행 "1988년 환율 및 국제경제정책 조율법(Exchange Rates and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Coordination Act of 1988)"을 개정하여, 재무부 장관이 연례 환율정책 보고서에서 외국 정부의 근본적인 환율 조작 여부를 고려토록 하고, 긍정 판정 시 이를 시정하기 위한 양자 협의를 개시함.

- 치솟는 실업률을 해결하기 위해서 해외로 일자리를 수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중단하고, 공공조달에 있어서 상대적인 불이익을 제공함.
 - 같은 맥락에서 오바마 당선자 경제 참모 중 하나인 어스텐 굴스비 교수는 취업비자(H1B 비자) 발급 문제에 대해서, 우수 외국 인력 흡수보다는 국내 인력 교육을 통한 인재 육성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며, H1B 비자 발급 확대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임.
-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공화당과의 정책공조 필요성, 미국의 자유무역 리더로서의 역할과 미국 소비자 후생을 고려하여 집권 초기의 보호무역주의는 잦아들 것으로 예상됨.
 - 클린턴 前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NAFTA를 반대했지만, 대통령 당선 이후에는 NAFTA를 찬성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꾼 바 있음.
 - 또한 조지 부시 前대통령의 대중국 화해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지만, 재임 기간에는 미·중 관계 정상화와 중국의 WTO 가입을 적극 지원한 바 있음.

□ 세부 공약 내용

- 미국 내 일자리 보장 및 글로벌 노동·환경 기준 강화 무역정책 추진
 - CAFTA(미-중미 자유무역협정)와 같이 동 기준에 미달한 협정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견지함.
 - WTO에 무역협정 집행(Enforcement)을 촉구하고, 외국 정부의 불공정한 보조금 지급 중지와 미국 수출품에 대한 비관세 장벽 철폐를 촉구함.
- 노동 및 환경 기준 강화에 맞춘 NAFTA 개정 필요
 - 다자간 협정의 경우에도 평균 6년에 한번 꼴로 재협상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체결된 지 16년이나 경과한 NAFTA에 대해서 새로운 노동 및 환경 기준을 반영한 재협상이 필요함.
- 현행 무역조정지원법(Trade Adjustment Assistance) 대상 범위를 서비스 산업으로 확대함으로써 해당 산업 내 근로자 트레이닝 지원
- 해외로 일자리를 수출하는 기업에 대해 세제 혜택 종료
 - 외국으로 오퍼레이션을 옮기는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공제를 종료하는 한편, 미국 내 일자리 유지 및 창출에 기여하는 기업이 공공입찰 계약을 수주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함.
- 미국 내 일자리(Full-time job) 유지 및 창출 기업에 세금 공제
 - 오바마 당선자는 작년에 일리노이 주 Richard Durbin 상원의원, 오하이오 주 Sherrod Brown 상원의원과 함께 “미국 내 본사를 유지하고 있으며, 해외 풀타임 근로자 수와 비교하여 미국 내 근로자 수를 유지하였거나 확대한 기업에 대해서 과세 대상 소득의 1%만큼 세액을 공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Patriot Employer Act of 2007 법안을 도입한 바 있음.

□ 오피니언 리더들이 예상하는 통상정책 방향

KOTRA의 미국 각 지역 KBC가 소재지의 학계와 업계 전문가와 실시한 직·간접 인터뷰 결과를 정리함.

- Brian Peck(Crowell Morning, 대표 변호사, 前 USTR 아시아 담당데스크)
 - 오바마 당선자는 대선 캠페인 기간 중 보호무역 색채를 띠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으나, 1기 각료들이 비교적 실용주의적인 인사들로 구성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급진적인 보호정책은 피할 것으로 전망됨.
 - 단, 중국 등 미국으로부터 많은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고 있는 일부 국가들에 대한 반덤핑 조치는 강화될 수 있음.
- 최운하(Common Wealth Bank(동포은행), 행장)
 - 오바마 정부에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오바마 변수라기보다는 경기침체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인들의 국민정서에 기초하여 자연스럽게 표출될 가능성이 있음.
 - 특히 미국산업의 자존심인 GM 등의 도산 위험이 높아질 경우, 부정적인 대외정서가 일시에 확산될 수 있으며, 이는 일본 또는 한국 자동차에 대한 극단적인 반감으로 표출될 수 있음.
- Steve Lamar(American Apparel and Footwear Association, 이사)
 - 오바마 정부에서는 통상정책의 기초가 공정무역, 보호무역주의로 바뀌면서 수입품에 대한 규제와 세관규정을 강화시킬 가능성이 높음.
- Seung Bach(California State Univ., 경영전략 교수)
 - 미국의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오바마 당선자의 정치성향이 비록 보호 무역주의 색채를 띠지만 집권 이후에는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이 수렴될 것이므로 극단적 보호무역주의를 추진하는 것은 어려울 것임.

- 이봉수(플로리다 주립대학교, 석좌교수)
 - 오바마 정부는 미국 중산층 보호 및 미국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미국 기업들의 해외 아웃소싱에 제동을 거는 등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할 우려가 있음.

- Katherine Barbieri(South Carolina 대학교, 정치경제학 교수)
 - 오바마 당선자가 보호무역주의자라는 인식이 강하지만 실제로는 매케인과 마찬가지로 자유무역을 중시하며, WTO가 공정한 무역을 위하여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함.
 - 오바마가 NAFTA, 한미FTA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미국이 손해를 입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재협상하자는 취지이며,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과의 교역을 제3국과의 정치적 협상의 도구로 적극 활용할 것으로 예상됨.

라. 주요 산업정책 방향 전망

- 오바마 정부가 산업별로 어떤 정책을 추진할지는 현 시점에서 예단하기 어려움.

- 단, 현 경제 위기의 진원이 금융산업이고, 이에 따른 신용 위축과 고유가 등으로 인해 미국 자동차산업이 크게 타격을 받은 것을 감안할 때, 금융과 자동차산업에 대한 가장 강력한 지원이 예상됨.
 - 미 의회는 9월 말, 미 자동차업체에 250억 달러를 저리로 대출하기로 결정하고, 이중 50억 달러를 GM과 크라이슬러 합병에 우선적으로 공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짐.

- 에너지 자립과 그린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신성장 동력원으로 꼽히는 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오바마 당선자는 향후 10년에 걸쳐 차세대 바이오 연료, 재생에너지 상용화 촉진 사업에 1,500억 달러를 투자할 것을 선거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음.
- 현재 주정부나 로컬정부 차원에서 산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RPS 등의 시스템을 연방정부 차원에서 강제함과 동시에 인센티브 제도를 확충함으로써 재생에너지 산업의 성장을 유도할 것으로 전망됨.

2. 우리나라 교역 및 투자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가. 한-미 경제·통상관련 핵심 이슈 및 전망

□ 한미FTA 비준

- 오바마 당선자는 선거 캠페인 당시부터 자동차 교역 불균형을 이유로 한미FTA 협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함.
 - 개정 범위를 협정 전체로 해야 할지, 특정 부문으로 제한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 없으나, 적어도 자동차 부문에 대한 개선이 없는 한, 비준 불가 입장이 확고한 것으로 현지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음.
- 이와 관련, 현지 오피니언 리더들도 자동차 부문의 문제 해결을 한미FTA 비준의 주요 변수로 인식하고 있음.
 - Myron Brilliant(미 상공회의소 US-Korea Business Council 회장)은 의회 지도부가 한미FTA 비준에 대한 지지의사를 피력해주는 조건으로 자동차 이슈에 대한 추가적 양허(concession) 또는 개선(progress)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며, 이와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든 백악관과 미국 자동차업계 대표 간 의견 조정 단계를 거칠 것으로 예상함.
 - FTA 전문가인 Jeffrey Schott(Peterson Institute for Int'l Economics 박사) 역시 한미FTA 체결 이후 미국의 금융위기, 미국 경트럭 시장 붕괴 및 자동차업계 몰락 위기 등 최근 상황을 반영하여 양국 간 자동차 관련 타협이 있을 것으로 예상함.
- 한미FTA 부결 가능성에 대해서는 FTA가 한미 양국 간 경제관계 뿐만 아니라 안보관계에 있어서도 중요도가 크다는 점에 있어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의회 비준이 가능할 것으로 관측하는 분위기임.

□ 보호무역주의 압력 증가

- 오바마 정부에서는 경기침체 및 무역적자 확대에 따라 보호무역주의 압력이 거세질 것으로 우려됨.
 - 경기침체로 인해 수입 증가율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무역수지 적자폭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경기침체로 인해 불황에 직면한 업계의 반덤핑 제소 건수가 증가할 가능성이 큼.
 - 월스트리트 저널은 중국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여 행정부와 의회 모두 민주당이 집권할 경우, 중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가 증가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함.
 - WTO 제소 등을 통한 제재 조치 강화는 중국이 주요 타깃일 것으로 전망되나, 우리나라 역시 영향이 불가피 할 것으로 분석됨.
 -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부시 정부에서는 WTO 제소 건수가 연평균 3건에 불과한데 반해, 클린턴 정부에서는 이의 4배에 육박하는 11건에 달한 바 있음.

□ 그린필드 투자 감소 우려

- 오바마 당선지는 해외로 일자리를 수출하는 기업(Offshoring)에 대해서 세금 공제를 중단하는 한편, 미국 내 일자리 수를 유지하거나 확충하는 기업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미국 내 일자리를 늘리고자 함.
- 이와 관련, 구체적인 운영방안이나 과급효과에 대해서는 발표된 바 없으나, 미국 기업의 해외 그린필드 투자를 저해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미국기업 투자유치 여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 단, 미국이 현재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유동성이 충분히 확보된다면 해외투자 대상지로 안정성이 결여된 중국, 러시아 등의 국가보다는 한국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 우리에게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음.

나. 주요 산업별 대미수출 및 투자에 미치는 영향

□ 개요

- 단기적으로 정치적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요소를 제외하면 대선 결과가 우리나라 주요 산업별로 대미수출과 투자유치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오히려 미국의 경기침체 정도가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오바마 정부에서는 경기침체 및 무역적자 확대에 따라 보호무역주의 압력이 거세질 것으로 우려되며, 특히 철강산업이나 섬유산업과 같이 그동안 미국 내에서 상대적으로 피해를 많이 본 것으로 인식되는 산업을 중심으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 자동차산업

- 오바마 정부가 현재 미국 자동차산업이 직면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자동차 산업에 대한 폭넓은 지원정책을 수립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미국 자동차 산업 경쟁력이 높아질 경우, 한국산 자동차의 대미수출에는 상대적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단, 빅3에 자동차부품을 납품하는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미국 자동차산업의 성장이 우리 기업의 자동차부품 수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특히 친환경 자동차 및 관련부품의 경우, 수출가능성이 높음.

□ IT산업

- 대선 결과보다는 미국의 경기침체가 언제쯤 회복되느냐가 중요하며, 특히 장기 성장동력 확충을 강조하는 오바마 당선자의 공약대로 R&D 분야의 세금공제를 영구화하고,全美 지역에 차세대 브로드밴드 설치를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할 경우, 이러한 IT산업 지원강화는 우리기업에게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음.

□ 철강산업

- 미국 철강업계에서는 우리나라와의 철강무역에 불공정한 요소가 있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루고 있으며, 오바마 정부에서의 전반적인 보호무역주의 강화 움직임과 함께 우리나라 철강제품에 대한 반덤핑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음.

□ 섬유산업

- 오바마 정부는 집권 초기에 National Committee of Textile Organization과 같은 미국 섬유제조업체 및 유관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호무역주의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으며, 주요 타깃은 중국산 섬유가 되겠지만 우리나라의 대미 섬유수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재생에너지산업

- 지난 10월 3일 의회 통과를 거친 금융구제법안 내 재생에너지 인센티브 안이 포함되어 있어 풍력, 태양광등 재생에너지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오바마 당선자가 연방정부 차원에서 RPS를 강제적으로 실시한다면 재생에너지산업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됨.
- 풍력 터빈 및 베어링 등 부품, 태양에너지 모듈 등을 위주로 우리 기업의 대미수출이 확대 가능함.

□ 전력기자재산업

- 오바마 당선자는 선거공약으로 인프라 확충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내걸었으며, 현지 통신·케이블 유통업체들에 따르면 전력시설 확충에 따른 전선, 커넥터, 인슐레이터 등 전력기자재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함.
- 대부분의 미국 전력시설 수명이 50~60년에 이르러 상당히 노후된 상태이며, 의회 차원에서 구체적인 전력시설 확충방안을 마련하여, 향후 3~5년간 활발하게 진행할 것으로 전망됨.

다. 미국 현지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주요 산업별 대미수출 및 투자에 미치는 영향

KOTRA의 미국 각 지역 KBC가 소재지의 업계 전문가와 실시한 직·간접 인터뷰 결과를 정리함.

□ 자동차산업

○ 자동차산업 평론가 B씨

- 미국 내 자동차 판매 감소, 금융위기에 따른 자동차론 부실 등 미국 자동차산업이 직면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오바마 정부는 자동차산업에 대한 지원정책을 수립할 것이며, 특히 친환경 자동차 개발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 이는 미국 자동차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져 한국산 자동차의 대미 수출에는 상대적으로 장기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한국기업 L사 관계자

- 오바마 정부에서는 금융 분야와 자동차 분야가 가장 강력한 지원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미국 자동차산업의 빠른 회복을 통한 생산량 증가는 우리 기업의 관련 부품 수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 단, 현재 추진중인 GM-크라이슬러 합병이 성사될 경우, 미국 자동차산업 구조개편이 불가피하고 비용절감을 위한 부품공급업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경쟁국 대비 우리기업들의 입지가 좁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미국기업 N사 관계자

- 오바마 정부에서는 미국 내 군수시장이 종전대비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대형 트럭 및 엔진, 군수용 차량을 생산하는 동사는 한국 등 해외시장 진출을 검토하고 있음.

- 단, 한미FTA 비준이 어려워짐에 따라 한국에서 외국산 트럭엔진에 부과하는 10% 관세가 한국시장 진출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에 생산시설 확보를 위한 투자를 검토하고 있음.

○ 기타 의견

- 오바마 후보가 한미FTA 비준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자동차 분야를 언급하고 있는 만큼 동 분야에 대한 해결 없이는 한미FTA 비준이 어렵고, 따라서 획기적인 수출증대 기회가 막힐 수 있음.
- 아울러 우리나라의 대미 자동차 수출은 대선 결과보다는 미국의 경기침체 정도에 달려 있음.

□ IT산업

○ 국제반도체장비소매협회(SEMI) 관계자

-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든 미국 IT산업 육성정책 기조는 지속될 것이며, 대선 결과가 한미 교역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임.

○ 바이어 F사 관계자

- 대선 결과가 한미 교역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며, 현 시점에서는 미국의 경제위기가 언제쯤 회복되느냐가 더 중요함.

○ 기타 의견

- 특히 장기 성장동력 확충을 강조하는 오바마 후보의 공약대로 R&D 세액 공제를 영구화하고, 전미 지역에 차세대 브로드밴드 설치를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할 경우, 이러한 IT산업 지원강화는 우리기업에게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음.

□ 철강산업

○ 철강노조 관계자

- 한국과의 철강무역은 불공정한 요소가 있기는 하지만 포스코가 미국에 합작 회사를 설립하는 등 긍정적인 면도 있음.
- 중국과의 불공정 무역이 점차 심해지고 있으며,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치는 미국 철강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에 오바마 정부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함.

○ 철강제조협회(SMA) 관계자

- 현재 한국과의 철강무역은 불공정한 요소가 있다고 보이며, 공정무역을 주창하는 오바마 후보의 당선으로 이러한 요소가 해소되기를 기대함.
- 한국으로부터의 철강 수입량은 미국 총 수입량의 10% 정도이며, 철강과 관련하여 발동중인 190여개의 수입규제 중에서 약 10%가 한국에 대한 수입 규제임.
- 한미FTA 협정 내용 중 반덤핑 사전협의 절차와 같은 무역구제 완화조치로 인해 미국 철강산업 경쟁력이 떨어질 우려가 있음.

○ 한국기업 D사 관계자

- 철강산업에 있어서 대미 교역관계의 최대 이슈는 반덤핑이며, 오바마 정부에서 반덤핑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우려됨.
- 단, 현재는 미화대비 원화 가치가 하락함에 따라 미화표시 국내 내수가격이 떨어지면서 반덤핑 규제 문제는 한국에 유리해졌다고 생각함.

□ 섬유산업

○ 바이어 A사 관계자

- 중국으로부터의 섬유류 수입여건이 점차 악화되는 상황에서 한미FTA 발효는 한국산 섬유의 대미수출이 대폭 확대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임.

- 단, 미국의 경기침체와 더불어 보호무역주의 성향을 갖고 있는 오바마 정부에서의 FTA 발효 시기가 관건임.
- 바이어 C사 관계자
 - 오바마 정부는 부시 정부에 비해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비록 주요 타깃은 중국산 섬유가 되겠지만 한국산 섬유의 대미수출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
 - 캘리포니아 패션협회 관계자
 - 섬유 수입업체 입장에서는 보호무역주의 가능성이 높은 오바마 정부에서의 상대적인 불이익을 우려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 섬유의 대미수출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
 - 미국 경제는 2009년 하반기 또는 2010년 상반기에 회복될 것으로 보이며, 이 기간 중 섬유업계의 비즈니스 트렌드에는 큰 변화가 예상되며, 특히 공급업체 입장에서 스피드 경쟁이 치열해질 것임.
 - 한국기업 S사 관계자
 - 오바마 정부는 집권 초기에 National Committee of Textile Organization과 같은 미국 섬유제조업체 및 유관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호무역주의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 한국산 대미 섬유수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단, 정권 중반기가 되면 섬유제조업체보다는 대정부 협상력이 뛰어난 월마트나 백화점연합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호무역주의가 수그러들 가능성이 높음.
 - 기타 의견
 - 오바마 후보의 섬유관련 통상정책의 초점은 미국 섬유산업 보호를 위한 중국 견제에 맞춰져 있음.

- 특히, 올해 말로 중국산 34개 섬유제품에 대한 수입쿼터 종료와 함께 중국산 섬유 수입이 급증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다양한 무역 구제조치를 시행할 전망이다.

□ 재생에너지산업(바이오 디젤)

○ 미국기업 R사 관계자

- 오바마 정부는 대체에너지 개발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정책을 시행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부시 정부가 바이오 에탄올에 초점을 맞춘데 반해서 오바마 정부는 대형버스나 트럭에 주로 사용되어 공공부문에 미치는 영향이 큰 바이오 디젤에도 큰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보임.
- 이는 상대적으로 바이오 디젤 분야에 대한 연구와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나라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며, 미국 바이오 디젤 연구소나 관련 기업과 협력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기타 의견

- 지난 10월 3일 의회 통과를 거친 금융구제법안 내 재생에너지 인센티브 안이 포함되어 있어, 풍력, 태양광등 재생에너지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오바마 당선자가 연방정부 차원에서 RPS를 강제적으로 실시할 경우에는 재생에너지산업이 추가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됨.
- 시장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풍력 터빈 및 베어링 등 부품, 태양에너지 모듈 등에 대한 소싱 확대가 가능하기 때문에 국내 관계 기업들이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2008년 KOTRA 발간자료목록

● Global Business Report

번호	제목	발간일자
08-001	한-EU FTA가 수출/투자유치에 미치는 영향 : 유럽 바이어 및 대한 잠재투자자 설문조사 결과	2008.1
08-002	대중 섬유수입규제 해제와 세계 섬유시장의 변화	2008.1
08-003	일본 소비패턴 동향 및 시사점	2008.2
08-004	주목해야 할 이머징 마켓의 소비 패턴 변화	2008.3
08-005	아세안 주요국 프랜차이즈 산업 분석 및 진출 전략	2008.3
08-006	유럽 그린구매 동향과 진출확대를 위한 키워드	2008.3
08-007	한-GCC FTA 체결에 대한 시각 및 반응	2008.3
08-008	중국의 최저임금 인상 동향과 전망	2008.4
08-009	중동·아프리카 프론티어 시장 유망품목과 성공전략	2008.4
08-010	중남미 보안시장 동향	2008.4
08-011	중국·인도·일본의 아프리카 시장쟁탈전	2008.4
08-012	러시아기업의 해외진출확대에 따른 우리의 대응방안	2008.4
08-013	2008 서남아시아를 주목하라	2008.4
08-014	미국 FDA 통관정책 및 우리 상품 통관거부에 대한 대응	2008.4
08-015	노동계약법 실시조례(초안)의 해석	2008.5
08-016	해외자원개발 피해사례 및 국가별 유의사항	2008.5
08-017	주요국의 서비스장벽 현황과 대응방안	2008.6
08-018	세계 섬유시장변화와 우리 해외생산전략	2008.6
08-019	베트남 경영환경 변화와 대응전략	2008.6
08-020	해외무역관에서 바라본 2008년 하반기 수출전망	2008.6
08-021	중, 하이테크 기술기업 우대혜택 변화와 전망	2008.6
08-022	대중국투자 뉴 트렌드와 시사점	2008.6
08-023	중동 주요국의 제조업 육성정책 및 우리의 진출전략	2008.6
08-024	떠오르는 마그레브 시장, 이렇게 공략하라	2008.6
08-025	베이징올림픽의 중국 소비경제 효과	2008.6
08-026	초고유가 시대 : 해외 주요국의 에너지 절약상품 동향	2008.7
08-027	아프리카 이동통신시장 비망	2008.7
08-028	유가상승에 따른 주요국 경제적 파급효과 및 대책	2008.7
08-029	주요국의 중소기업 지원정책 : 글로벌 중소기업을 향해	2008.7
08-030	한국 및 경쟁국 기업의 해외투자진출 유형 선호 비교와 시사점	2008.7
08-031	작은변화 큰시장 - 마이크로트렌드를 포착하라	2008.7
08-032	인도시장 주요수출품목의 한·중·일 경쟁 분석	2008.7
08-033	KOTRA-무역협회 공동 FTA가 우리수출에 미치는 영향 조사	2008.8
08-034	이라크 진출, 이제는 준비할 때	2008.8

번호	제목	발간일자
08-035	동서남아 진출, 이슬람 금융으로 하라	2008.8
08-036	베트남 경제분석과 향후 전망	2008.9
08-037	미 금융위기에 따른 주요국 경제 및 기업에 미치는 영향	2008.9
08-038	수출시장 긴급점검 : 무역수지 개선을 위한 수출확대 전략	2008.9
08-039	유럽 조선기자재 신흥시장 동향	2008.9
08-040	글로벌 탄소시장 현황 및 주요국의 대응 사례	2008.10
08-041	중국 노동계약법 실시조례 해설	2008.10
08-042	미국 금융위기 속에서 뜨는 상품	2008.10
08-043	중남미 수출현장의 한·중 경쟁현황	2008.10
08-044	기업 글로벌 전략으로서의 비즈니스 프로세스 아웃소싱 현황	2008.10
08-045	2008 중국 Grand Survey	2008.10
08-046	2008 베트남 Grand Survey	2008.10
08-047	유럽 신재생에너지 산업동향 및 진출방안	2008.11
08-048	인도 경제의 위기와 기회	2008.11

● KOTRAS자료

번호	제목	발간일자
08-001	2008년 지역별 진출확대 전략	2008.1
08-002	러시아 투자실무 가이드	2008.1
08-003	중국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 10대 판례집	2008.2
08-004	멕시코 투자실무 가이드	2008.4
08-005	청산매뉴얼	2008.5
08-006	중국지재권대리사무소 디렉토리	2008.5
08-007	중국 유통시장 진출 가이드	2008.5
08-008	EU 현지 기업들의 REACH 대응사례와 시사점	2008.5
08-009	중국 신노동법 下 인력관리 매뉴얼	2008.5
08-010	2007 외국인투자옴부즈만 연차보고서	2008.6
08-011	Foreign Investment Ombudsman Annual Report 2007	2008.6
08-012	북미 유통시장 진출 가이드	2008.6
08-013	중국투자가 심층조사 보고서	2008.6
08-014	말레이시아 투자실무가이드	2008.6
08-015	2007년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2008.6
08-016	중국 환경시장 진출가이드	2008.7
08-017	유럽 대형 IT 유통업체 진출 가이드 - 7대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2008.7
08-018	2008년 세계 주요도시의 생활여건	2008.7
08-019	Q&A로 본 베트남투자 A to Z	2008.7
08-020	2007/2008 해외진출 한국기업 디렉토리(CD)	2008.7
08-021	2008 경기국제보트쇼 종합보고서	2008.7
08-022	베트남 진출기업 청산매뉴얼	2008.7
08-023	태국 투자실무가이드	2008.7

번호	제목	발간일자
08-024	2008 외국인투자기업 생활환경애로조사	2008.8
08-025	2008 외국인투자기업 경영환경애로조사	2008.8
08-026	중국 이전가격 과세제도 해설 및 대응방안	2008.8
08-027	아시아 자원개발진출가이드 I - 인도네시아,인도,방글라데시,호주,캄보디아,뉴질랜드 -	2008.8
08-028	아시아 자원개발진출가이드 II - 필리핀,베트남,미얀마,태국,스리랑카,말레이시아,파키스탄 -	2008.9
08-029	중국 주요 업종별 서비스시장 진출가이드	2008.9
08-030	2008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 결과보고서	2008.9
08-031	투자실무가이드 -일본-	2008.9
08-032	All about MYANMAR FDI	2008.9
08-033	Q&A로 본 중국투자 A to Z	2008.9
08-034	카자흐스탄 투자실무가이드	2008.9
08-035	남아공 투자실무가이드	2008.9
08-036	UAE 투자실무가이드	2008.9
08-037	아제르바이잔 투자실무가이드	2008.9
08-038	우즈베키스탄 투자실무가이드	2008.10
08-039	이집트 투자실무가이드	2008.10
08-040	나이지리아 투자실무가이드	2008.10
08-041	2007년도 Invest KOREA 연차보고서	2008.9
08-042	미국 건설중장비 및 상용차시장 진출가이드	2008.10
08-043	해외 전문인력 동향보고서	2008.11

● 설명회자료

번호	제목	발간일자
08-001	2008 세계시장진출전략 설명회	2008.1
08-002	2008 세계시장진출전략 비즈니스포럼	2008.1
08-003	2008 세계시장진출전략 설명회 및 비즈니스 포럼 가이드북	2008.1
08-004	한-아세안 FTA순회설명회 (Korean -Asean FTA Seminar)	2008.5
08-005	몽골투자포럼(Mongol Korea Investment Forum)	2008.5
08-006	러시아 우랄시장 설명회	2008.5
08-007	극동 시베리아 개발 프로젝트 설명회 및 상담회	2008.5
08-008	중국 사업환경 변화와 대응전략 설명회	2008.5
08-009	중동 산유국 진출전략 설명회 및 상담회	2008.6
08-010	Global Project Plaza 2008	2008.6
08-011	한일 에너지절약환경 포럼	2008.6
08-012	2008 한중일산업교류회 심포지움	2008.6
08-013	러시아 중앙아시아 진출전략 설명회	2008.6
08-014	2008 한중일산업교류회 심포지움	2008.6

번호	제목	발간일자
08-015	미국 유통시장 진출전략 설명회	2008.6
08-016	러시아 모스크바주 투자환경 및 한국전용공단 설명회	2008.8
08-017	러시아 지식재산권 설명회	2008.9
08-018	중국이후(Post China)의 동남아 투자진출전략 설명회	2008.9
08-019	중국시장 환경시장 진출전략 설명회	2008.10
08-020	중국 공동물류센터 사업설명회	2008.10
08-021	중남미 주요국 투자설명회	2008.10
08-022	유망지역 해외투자전략 설명회	2008.10
08-023	2008 제3회 국제자원협력심포지엄	2008.10
08-024	베트남공단 설명회/상담회	2008.10
08-025	중동부유럽 투자진출전략 설명회	2008.10
08-026	해외시장 긴급점검 - 위기 속의 기회를 잡아라	2008.10
08-027	이란 진출 설명회 및 상담회	2008.10

● 산업연구

번호	제목	발간일자
08-001	태국의 주요산업	2008.10
08-002	필리핀의 주요산업	2008.10
08-003	카자흐스탄의 주요산업	2008.10
08-004	UAE의 주요산업	2008.10
08-005	헝가리의 주요산업	2008.10
08-006	칠레의 주요산업	2008.10
08-007	나이지리아의 주요산업	2008.10

작성자

- ◆ 로스앤젤레스KBC 김재성 차장 (jaesung@kotra.or.kr)
- ◆ 실리콘밸리KBC 구본경 과장 (bonkyung@kotra.or.kr)
- ◆ 디트로이트KBC 손병철 과장 (bcson@kotra.or.kr)
- ◆ 워싱턴KBC 이정선 과장 (jeongsunny@kotra.or.kr)
- ◆ 시카고KBC 어재선 과장 (imaro75@kotra.or.kr)
- ◆ 마이애미KBC 연승환 과장 (yeon@kotra.or.kr)
- ◆ 뉴욕KBC 최재원 대리 (jaychoi@kotra.or.kr)
- ◆ 구미팀 김준규 과장 (jkkim1204@kotra.or.kr)

Global Business Report 08-049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경제·통상정책 방향 전망과 시사점

발행인 | 조환익
발행처 | KOTRA
발행일 | 2008년 11월
주소 | 서울시 서초구 현릉로 13
(우 137-749)
전화 | 02) 3460-7114(대표)
홈페이지 | www.kotra.or.kr

Copyright © 2008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